

서북출신 엘리트의 해방 후 남한 관료 진출

이 봉 규*

- 1. 들어가며 : 서북출신/월남민/관료는 누구인가
- 2. 주요 서북출신의 남한 관료 진출
- 3. 식민관료의 행정체험과 해방 후 재생
- 4. 나가며 : 월남민 관료의 정체성 만들기

국문초록 | 이 글은 서북출신 엘리트들의 해방 후 관료 진출 양상을 살펴보는 가운데, 식민기시기 관료로서 행정체험이 어떻게 해방 이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시도다. 기존 연구에서는 서북출신의 일반적 특성으로 기독교-민족주의-반공주의를 초점에 두었다. 여기에는 서북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한 조선민주당계열의 정치지도자들 그리고 미국 유학경험을 지녔던 미군정기 고급관료들이 주요 대상이었다. 하지만 서북출신 관료, 특히 식민지 경찰들의 회고를 검토한 결과 만주와 조선 등지에서 일제에 협력했던 서북출신 엘리트들의 경험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식민지 경찰관료로서의 행정체험과 방공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해방정국기 냉전적 맥락 속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선택적으로 재생시켰다. 이들의 식민지 행정체험은 해방정국기 제주4·3을 비롯하여 반공국가 만들기의 기술이자 자산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결국 서북출신 엘리트들의 일반적 경향을 지역적 특성에 기초한 기독교-민족주의-반공주의, 나아가 친미로 규정하는 것에 더하여 서북출신 엘리트들의 행정체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핵심어 | 서북, 경찰, 관료, 행정체험, 반공주의, 방공, 윤우경, 홍순봉
 (투고일 : 2018. 7. 17, 심사일 : 2018. 8. 10, 게재확정일 : 2018. 9. 13)

* 울산대학교 역사문화학과

1. 들어가며 : 서북출신/월남민/관료는 누구인가

오제도¹⁾와 선우종원²⁾. 이들은 해방 이후 소위 ‘사상검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서북’³⁾출신의 ‘월남민’이란 사실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다. 이들을 서북출신, 혹은 월남민으로 파악해도 될까? 그도 아니면 종래대로 사상검사, 보다 큰 틀에서 관료로 이해되어야 할까?

먼저 ‘서북’출신이란 점에 주목해보자. 기존 한국근현대사 연구에 의하면,⁴⁾ 평안도를 비롯한 서북출신들은 기독교와 우선 연관된다. 전근대 시기 중앙으로부터 소외되어 관계 진출 등에 있어 제약을 받던 서북출신들은 개항을 전후하여 서북지역은 여타 한반도 지역보다 빠르게 기독교를 수용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북에서는 근대 문물과 사상이 유행하였다.⁵⁾ 식민지기 흥사단계 국내조직 수양동우회가 터잡았던 서북지역은

- 1) 1917년 평남 안주에서 출생한 그는 1945년 11월 3일 신의주에서 평양을 거쳐 월남하였다(북한 편집부, 『吳制道 回顧錄 (中)』, 『북한』 32, 1974. 8, 북한연구소, 154-158쪽; 한국논단 편집부, 『아직도 뛰고 있는 吳制道 검사: 목숨바쳐 自由民主지킨 사상검사』, 『한국논단』 122, 1999, 163쪽). 개신교인으로 영락교회 장로였다. 보다 상세한 이력은 <표 2> 참조.
- 2) 1918년 평남 대동에서 출생한 그는 1945년 신부 양기남과 함께 월남하였다. 천주교인이기도 하다. 상세한 이력은 <표 2> 참조.
- 3) 윤정란에 의하면, “한반도의 서북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평안도, 황해도, 함경도 등 북한 대부분의 지역을 일컫”고, 또한 “일반적으로 기독교계에서 서북지역이라고 지칭하는 곳은 북장로교가 관할했던 평안도와 황해도 이북지역”을 뜻한다고 하였다. 김상태의 의견을 함께 소개하며 황해도 이북지역은 재령, 장연, 안악, 은율, 송화, 신천, 황주, 봉산 등 평안도와 정서적으로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지역을 말한다고도 하였다. 본고에서도 이들 구분대로 평안도 및 황해도 이북지역을 서북지역으로 간주한다.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아카데미, 2015, 29-30쪽. 특히 각주 4).
- 4) 대표적으로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김상태, 『근현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윤정란, 위의 책.
- 5) 서북출신들의 ‘신흥 중간계급’은 자신들의 사회적 처지와 지향을 대변하는 새로

흥업구락부 계열의 기호지역과 함께 한반도의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을 대표하였다. 이들 기독교 민족주의 세력은 대체로 시민사회에 기초한 자유주의 국가건설을 지향하였다.⁶⁾ 해방 직후에는 조선민주당을 결성하여 주요 정치지도자들이 집결하였으나, 소군정과 공산주의자들의 탄압 속에 서북지역을 벗어나 상당수가 월남하였다. 이후 흥사단 단원들은 미군정청 한국인 관료의 핵심을 이루었고, 서북청년회로 대표되는 월남 반공주의 기독교인 그룹을 형성하는 것으로도 정리된다. 이승만정권기 서북출신들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는 가운데 민주당 신파세력을 형성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처럼 ‘서북출신이란 키워드와 관련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기독교-민족주의-반공주의라는 주제가 주로 연관되었다. 실제 적지 않은 서북출신 엘리트들이 해방을 앞두고 더러 식민지배에 협력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식민지기 친일 이력과 관련하여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가령, 미군정 관료등용 양상에 관하여 김상태는 중간관료집단에서 친일인사가 상당수 존재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고급관료 등을 포함하여 미군정관료로의 신규 진출 양상을 정리하면서 친일파집단을 주요 분류군에서 제외하였다. 대신 연희전문 출신, 충남 공주 영명학교 관련 인사, 개성 한영서원(송도고보)과 YMCA 및 흥업구락부 계열, 그리고 평안도 출신(흥사단 계열)으로 나누어 파악하였다.⁷⁾

운 언어이자 세계관으로 기독교에 주목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교세가 기호지방에 비해 더욱 컸다고 장규식은 언급하였다.

6) 장규식, 앞의 책. 물론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의 도입이 조선에 본격화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의 반종교운동에 관한 대응의 일환으로 기독교사회주의가 등장하기도 하였다. 식민지기 기독교사회주의 경험을 통하여 평남건준, 조선민주당에 관계하는 기독교 인사들은 공산주의세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한편, 공산주의세력과의 민족통일전선에도 유화적이었다고 평가되었다. 김선호, 「해방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민족통일전선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1, 2006, 1장.

7) 김상태, 앞의 글, 105-113쪽.

둘째, 이들이 ‘월남민’이란 점에 주목해보자. 대표적으로 김귀옥은 종래 연구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았던 정착촌 월남민들을 주목하여 이들의 정체성을 월남 시기와 동기, 계층적 특성, 세대 간 비교 등 구술생애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명하였다.⁸⁾ 이른바 ‘엘리트층’ 월남민들과 정착촌 월남민을 견주어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정치, 사상적 동기로 한국전쟁 이전에 주로 월남하였다는 식의 월남민 통념에 대한 반박이기도 하였다.⁹⁾ 이후 월남민 연구는 경계넘기와 이산의 문제를 비롯하여 남한 정착과정과 주요 정착지,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 등에 의하여 발생하였던 배제와 폭력의 경험, 남에서의 월남민 네트워크와 정체성 등까지도 폭넓게 다루었다.¹⁰⁾ 사회사적, 구술사적 지평으로 월남민 연구가 확대, 심화되었다.

그에 반해 ‘엘리트층’의 월남은 여전히 해방 이후서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의 반공주의 형성을 계기로 파악하기 쉽다. 김귀옥 역시 ‘엘리트층’ 월남민은 정착촌 월남민에 비하여 정치, 사상적 동기¹¹⁾-반소반공

8)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 밑으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특히 ‘엘리트’ 월남민에 관한 분석은 〈제5부 : 월남민 간 정체성의 비교〉의 「제13장 엘리트층 월남민은 누구인가」 참조.

9) 강정구, 「해방후 월남민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또한 월남민에 대한 정치사상적 월남동기와 한국전쟁 이전 월남이라는 통념을 반박한 연구다.

10) 대표적으로 연세대 국학연구원 역사와공간연구소가 2015년도부터 3년간 진행했던 〈월남민 구술생애사 조사연구〉팀의 성과가 이에 해당한다.

11) 趙馨·林明鮮은 정치, 사상적 동기에 의한 월남을 해방이후 월남의 ‘옴’가는 동기로 보았다(趙馨·林明鮮, 「북한출신 월남민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변형운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150쪽). 김귀옥은 종래 연구나 상식 차원에서 파악했던 정치, 사상적 월남동기가 실제 그러한지 논증하고자 하였다. 조사연구 결과 엘리트 월남민에게서 정치, 사상적 동기가 주류를 이룬다고 재차 결론지으면서도 월남시기, 즉 전쟁 중 월남한 경우에는 “비자발적 상황에 따른 피난”이 상대적으로 더 주된 월남 동기였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김귀옥, 앞의 책, 413쪽).

투쟁 계기, 공산주의(사회주의)가 싫어서, 반동지주 및 종교인으로 판명, 개인기업 활동의 통제, 자유로운 생활 위해-에 따른 월남이 더욱 많았고, 반공주의와 체제수호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는다고 보았다. 월남 이전 체험이 해방 후 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하지 못한 셈이다.

본고는 서북출신 월남민 관료¹²⁾의 특질을 파악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종래 월남민을 핵심어로 삼아 전개하였던 연구 성과에다 서북출신 관료들의 해방 전후 행적을 교차시켜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해방 이후 주요 서북출신 월남민 관료를 간략히 소개한다. 이들 중 종래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서북출신 식민지 경찰관료의 회고들을 3장에서 검토한다. 연구사료의 중심에다 회고를 두는 일은 여러모로 부담스럽지만, 행정관행과 체험의 영역을 기록으로나마 살펴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현대사에서 행정 관료를 특정한 집단으로 설정해 이들의 공통적 특징을 추출하고 성격을 규정하는 게 과연 가능할지, 유의미할지에 대해 조심스럽다. 다만 이 글에서는 일단 식민지기 행정체험과 행정관행의 학습, 그것의 선택적 재생이란 차원에 초점을 두어 살폈다.

2. 주요 서북출신의 남한 관료 진출

서북출신 엘리트들의 해방 후 남한 관료 진출 양상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평양고보나 오산학교 등 주요 이북 학교, 나아가 이북 각지의 향토사

12) 일반적으로는 관료를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과 정치적 정책적 목적에 영향받는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이 글에서는 서북출신들이 어떠한 경험과 과정에 의해 관료로 등장하는지 주목하므로, 일관되게 법적 구분법을 따르지는 않았다.

차원에서 출신인물들이 상당수 정리되었다.¹³⁾ 동화연구원에서는 이들을 “이북출신 행정부 고관”, “경제인맥” 등으로 칭하며 『月刊 同和』에서 전모를 정리하기도 하였다. 「完全 分析 : 이북출신 行政府 고관들의 星宿圖」란 글에서는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기도 하였던 박은식을 비롯하여 이승만과 김구의 존재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있어” “西北人의 얼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일”로 평가되었다.¹⁴⁾

〈표 1〉 역대 장관 행정분야별 출신도별 분포
(단위 : 명, 1989년 11월 현재)

분야별	정무	공안	경제	사회	기타	계	
출신도별	威北	3				2	5
	威南	2	1	8	1	4	16
	平北	11	3	5	5	2	26
	平南	6	2	10	10	2	30
	黃海	5	4	13	7	1	30
이북출신	27	10	36	23	11	107	
역대장관	135	98	181	144	29	587	

출전 : 金孝淑(同和研究所 상임연구위원), 앞의 글, 215쪽.

비고 : 정무(외무, 국방, 총무, 통일, 공보, 문공, 무임소, 제2정무), 공안(법무, 내무, 중정), 경제(경제기획, 재무, 상공, 부흥, 건설, 동력자원, 농림, 과기), 사회(문교, 사회, 교통, 체신, 노동), 기타(심계, 감사, 대통령비서실)

또한 해방직후부터 1989년 말까지 李允榮, 白斗鎭, 張都暎, 丁一權, 劉彰順, 盧信泳, 姜英勳 등 총 7명이 이북 출신 국무총리(국무총리 서리

13) 이러한 성과들은 무수히 많다. 여기서는 『月刊 同和』 각호에 이북의 주요 중고등학교를 돌아가며 소개하면서 출신 인사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간행 당시 주요 인사들의 직업도 일부 정리하고 있어 유용하다는 점만 언급해두고자 한다. 남성들이 진학했던 교육기관 뿐 아니라, 여성교육기관까지 아우르고 있어 월남한 여성인사들의 전모를 파악하기에 특히 유용하다. 『月刊 同和』의 일부 섹션에 한하여 김귀옥이 자신의 월남민 엘리트 연구에 활용한바 있었다.

14) 金孝淑(同和研究所 상임연구위원), 「完全 分析 : 이북출신 行政府 고관들의 星宿圖」, 『月刊 同和』, 同和研究所, 1989. 11, 208-223쪽.

및 내각수반 포함, 총 27명)였는데, 정일권을 제외한 나머지는 서북출신이다. 정부수립 이후 부처 장관 및 장관급(심계원장, 감사원장, 정보부장, 안기부장,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오른 총 587명 중 107명이 이북 출신이다. 출신도별 분포를 살펴보면 함북 5명, 함남 16명에 비하여 평북 26명, 평남 30명, 황해 30명으로, 황해 남부지역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이북 출신 중에서는 서북출신들이 우위를 차지한다.

다음은 이 글에서 주로 다룬 서북출신 월남민 관료의 해방 전후 이력이다.

〈표 2〉 주요 서북출신 월남민 관료

성명/출생	구분	해방 이전	해방 이후 주요 경력
吳制道 /평남 안주	검사	평양중학卒, 早稻田大 법학卒, 신의주지법 판임관견습(서기)(40)	관검사특별임용(46), 군검경합동수사본부 검찰측책임자(50), 서울지검 부장검사(정부1부, 50), 고검 검사, 대검 검사(58) 한국반공연맹 이사, 『北韓』 편집·발행인, 제11대 아세아반공대회한국대표, 제9대 국회의원
鮮于宗源 /평남 대동	검사	평양고보卒, 경성제대 법문학부 법학卒, 高文 사법과(42)	사법관시보 임명(45), 법무부초대검찰과장(48), 치안국 정보수사과장(50), 장면국무총리 비서실장(51), 한국조폐공사사장(60), 국회사무총장(71)
李太熙 /평남 강동	검사	평양고보卒, 東北帝大卒, 美예일대법과대학원卒, 高文 사법과	군정청 사법부 검찰국장, 대검 검사(48), 법무부 법무국장(49), 서울지검 검사장(49), 부산지검 검사장(50), 검찰총장(60), 梨大 법정대학장, 한국법학원 원장, 평양고보 총동창회 회장
張載甲 /평북 용천	검사	高文사법(41), 대구지법 사법관시보(42), 경성지법 검사(44), 광주지법검사(45)	군정청 사법부 검찰국 검찰관(46), 서울지검 부장검사(48), 법전편찬위원회 위원(52), 대검검사 퇴직(58)
尹宇景 [尹洪益] /평남 양덕	군경	양덕보통卒, 경부고시합격(29), 해주법 사법계주임(36), 황해 송화법(45)	파주, 영등포, 마포서장(46), 수도경찰청 총무과장(47), 서울시경찰국 경무과장(48), 헌병대위(49), 헌병중령(50), 서울시경찰국장(51), 내무부 치안국장(52), 구황실재산사무총국장(53)
金虎羽 /평남 평원	군경	양덕법 경부보(33), 중화법 경부보(35), 강서법 경부보	마포법(46), 내무부치안국 수사과장, 동대문법(50), 충남 경찰국장(50)

		(37), 고등관 경부(38), 평양경찰서(39), 영원법(45)	
李益興 /평북 박천	군경	九州帝大 법문학卒, 박천법(45)	동대문법(45), 수도경찰청 부청장, 제1관구경찰청장, 제7관구 경찰청(이상 45), 제1사단 헌병대장(49), 서울헌병대장(50), 서울경찰국장(50), 내무부 치안국장(51), 서울부시장(52), 경기도지사(53), 내무부장관(56), 제4대국회의원(58)
李夏榮 /평북 위원	군경	明治大學 英法卒, 평북 경부, 위원법(45)	제1관구경찰청 부청장, 총경(48), 치안국 사찰과장(48), 치안국 수사지도과장(49), 경기도 경찰국장(50), 치안국 경찰본대장(50), 태백산지구 경찰전투사령관(51), 경남 경찰국장(53), 강원 경찰국장(54), 치안국 특수정보과장(55), 경기치안국장(56), 경찰전문학교 교장(57), 전남도지사(59)
田鳳德 /평남 강서	군경	경성사범卒(32), 京城帝大 법학卒(40), 高文양과(39), 조선훈독부 내무국 지방과(40), 평북 경찰부 보안과장(41), 경기경찰부 수송보안과장, 경시(45)	군정청 경무국장 겸 도경장부 보안과장(46), 경무부 공안국 공안과장(48), 중앙선거경찰위원회(48), 헌병사령관(49), 국무총리 비서실장, 대한변협회장(69)
洪淳鳳 /평남 대동	군경	대동 남형제산면 면서기, 대동 임시고원, 평양법(19), 경부고시 합격(22), 평양법 경무과 경부보(24), 용강법 사법주임(26), 신의주법 사법계차석, 위원, 초산법 사법주임(28), 경부 승진(31), 만주국행정관 부임 및 賓江省公署 경무청 경무과 企劃股長(35), 간도성 경무청 보안과차석(37), 이사관승진 및 서평성법 보안과장(41), 중앙고등경찰학교 교관(43), 국무원총무청 홍보처 참서관(45)	경무부 교육국 교양과장 겸 국립경찰전문학교 부교장(46), 경무부 공안국 공안과장(48?), 제주비상경비사령부 총경(48), 제주경찰청장(48), 서울헌병대장(50), 경남병사구사령관(51), 내무부 치안국장(52), 반공연맹 이사(64)
文龍彩 /평북 정주	군경	오산중卒, 봉천군관학교 5기卒, 만주군헌병 상위(대위)	군사영어학교 부위임관, 제주도경 수사과장(47), 제주경찰서장(47), 육군장교전직(48), 제16연대장(50), 준장 예편
高秉億 /평북 의주	군경	관동군 신경현병대 삼등헌병보(33), 하얼빈헌병대 상등헌병보(36), 신경현병대	군정청 경무부 수사국 총무과장(46), 수사국 정보과장(47), 사상관계 및 횡령으로 검거(48), 복직(48), 제주경찰감찰청(48)

		감독헌병보(39), 만주국 훈8 등서보장, 훈7등욱일장	
韓根祖 / 평남 강서	政官	明治大學卒(21), 日변호사합격, 평양서 변호사(22)	평양시장(45), 남조선과도정부 사법부 총판차장(46), 조선민주당 부당수/최고위원(48), 4~5대 국회의원(58, 60)
盧鎮高 / 평남 용강	政官	평양고보卒(20), 朝鮮辯護士試 합격(27), 明治大學卒(28), 평양서 변호사(28)	서울공소원판사(45), 대법원 대법관(46), 중앙선거위원장(48), 검찰위원회 위원장(49), 심계원장(52), 변호사(58)
鄭一亨 / 평남 용강	政官	연진卒(27), 뉴욕대 신학부卒, 드루대 철학박사(35), 연전교원(37)	군정청 인사행정처장(45), 유엔파리총회 한국대표(48), 대한체신사장(50), 2-7대 국회의원, 민주당외교부장(56), 외무부장관(60), 신한당고문(66), 신민당부총재(67), 신민당고문(74)

출전 :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db.history.go.kr) ;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people.aks.ac.kr) ; 『대한민국행정간부전모』, 국회공문사, 1960 ; 『月刊 同和』, 동화연구소, 1989.10, 300-301쪽 ; 북한 편집부, 『吳制度 回顧錄』 상/중, 『북한』 31-32, 1974 ; 최홍순, 『실향법조인』, 『북한』 175, 1986 ; 鄭一亨, 『오직 한 길로』, 新進文化社, 1970 ; 선우종원, 『격량80년』, 인물연구소, 1998 ; 尹宇景, 『晩省錄 : 단 한번 잠시 느껴본 행복감』,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1992 ; 憲兵史編纂室, 『한국헌병사 : 創設·發展編』, 憲兵司令部, 1952 ; 장신, 『조선총독부의 경찰 인사와 조선인 경찰』, 『역사문제연구』 22, 2009 ; 강성현, 『1945-50년 '경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 『기억과전망』 25, 2011 ; 양봉철, 『홍순봉과 제주 4·3』, 『4·3과 역사』 17, 2017 등 참조.

서북출신 엘리트들은 해방, 38선 분할을 기점으로 서북지역에서 활동하다 월남한 인사들과 그렇지 않은 인사들—즉 서북출신이되 국외에서 활동하다 38선 이남에 정착하거나 애초 38선 이남이 주요 활동거점이었던 이들—로 구분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서북지역에서 활동했던 엘리트, 그 중에서도 특히 조선민주당 계열의 인사들에 주목한 경향이 크다. 이 경우 서북출신들을 기독교—민족주의—반공주의로 정리하기에 용이하다. 실제 이윤영, 韓根祖 등 조선민주당계열의 서북출신 인사들은 조만식과 함께 평양에서 평남건국준비위원회 활동에 착수하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이후 좌우통일전선이 와해되고 북에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월남하였다. 이들 상당수는 1920~30년대 신간회활동을 통해 민족통일전선운동에 나섰고, 민족주의에 토대를 두었다.¹⁵⁾ 한근조는 제4차 조선공산당 평양지부 사건의 변호를 맡았는가 하면, 평남 용강 출신인 盧鎮高과

함께 평양기독교청년회에서 대중법률강좌를 열기도 하였다.¹⁶⁾ 노진설은 조만식과 함께 평남건준 조직을 돕다가 “공산당의 박해”를 피해 46년 월남했고, 한근조 추천으로 법관이 된 후, 대법관으로 승진했다.¹⁷⁾ 이들은 해방 이후 헌법기초위원을 역임하였다.

알려진 대로 서북출신 엘리트 상당수는 미군정기의 주요 관료로 활동하였다. 鄭一亨과 李卯默은 미군정기 서북출신들의 관료 등용에 핵심적 가교로 역할했다. 미군정 인사행정처장을 역임했던 황해 안악 출신 정일형은 해방 당시에는 평북 영변에서 건국준비위원회 책임을 맡았다가 소련군이 평양에 진주하자 월남하였다. 그의 부임 당시 7명이었던 인사과는 이후 인사행정처로 명칭을 바꾸었고, 「인사행정처의 직능규정에 관한 건」(미군정 법령 제69호) 공포 이후 정부 공직자의 채용, 배치, 양성 등 인사 관련 규정 및 규칙 제정권한이 부여돼 권한이 커졌다고 알려졌다.¹⁸⁾ 당시 민정장관 안재홍은 이북출신 인사만 등용한다고 정일형을 문책하기도 하였다. “홍사단은 물러가라”, “이북놈들 제거하라”는 “공산당식 뼈라”가 자주 뿌려졌다고 정일형은 후일 회고하였다.¹⁹⁾ 서북출신이되 국외나 38선 이남에서 활동했던 이묘묵은 미군정에서 하지 중장의 비서 겸 통역관으로 재직하며, 서북출신들을 관료로 진출시키는 이른바 ‘통역정치’를 담당했다고 알려졌다.²⁰⁾ 그는 김상태에 의해

15) 김선호, 앞의 글, 282~285쪽.

16) 문준영,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독립” 문제」, 『法史學研究』 34, 한국법사학회, 2006, 186~187쪽. 김익진은 충남 태생이나 1927년 7년여 판사생활을 정리한 후 평양을 거점으로 변호사활동을 펼쳤다. 이 때문에 김상태는 그를 평안도출신 인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김상태, 앞의 글, 90쪽.

17) 최홍순, 『실향법조인』, 『북한』 175, 1986, 167쪽.

18) 김상태, 앞의 글, 108~109쪽, 113~118쪽 ; 〈정일형 이태형박사 기념사업회 (http://www.chyunglee.com)〉 정일형 이력.

19) 鄭一亨, 『오직 한 길로』, 新進文化社, 1970, 114쪽.

20) 서울신문사 편, 『駐韓美軍 30年 : 1945~1978』, 杏林出版社, 1979, 67쪽.

충남 공주 영명학교 관련인사, 미국유학 출신으로 호명되었으나 친일행위 전력이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였다.²¹⁾

미군정은 효율적 점령통치, 치안 안정을 위해 경찰기구 등 종래 제도를 존속시켰다. 이 과정에서 식민지 경찰관료가 광범하게 재등용되었다. 웨드마이어 사절단 보고서에 의하면, 식민지기 경찰로 재직한 80%가 미군정 경찰로 재기용되었다.²²⁾ 제2관구청장을 지낸 李益興, 영등포서 시장을 역임한 尹宇景, 제주 4·3 진압에 나섰던 洪淳鳳, 경무부 공안과장을 역임한 田鳳德 등이 대표적인데, 모두 서북출신이자 친일여력의 소유자다. 이들은 식민지기 여느 말단경찰로 머무른 인사들이 아니었다. 해방이후에는 식민지 경찰관료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간부직, 내무부 요직에 등용된 공통점을 지녔다. 이들은 반민특위의 검거활동이 본격화될 당시 헌병대 등 군으로 몸을 피했다. 평양 출신의 白元教, 황해 출신 노엽 등도 함께하였는데, 이후 헌병대 특무부대의 주요 인맥이 되기도 하였다.²³⁾ 경성제대 법문과를 졸업하고 고문에 합격한 이력이 있기도 한 전봉덕이 헌병사령관으로 복무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²⁴⁾ 길진현은 “군이 필요해서 데려온 인재를 골라가며 친일파라고 몰아세우는 이유가 뭐냐”고 맞서며 이들을 서북출신 당시 蔡秉德 참모총장이 두둔하였다고 정리한바 있다.²⁵⁾ 이후 헌병대를 비롯하여 군은 검찰, 경찰과 함께 사상사법 기조로 ‘빨갱이 만들기’에 적극 가담하였다.

2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선정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명단 문화/학술부문에 포함되었다.

22) 김진웅, 「미군정 기 국내정치에 있어 경찰의 역할」, 『大丘史學』 97, 2009, 6쪽.

23) 강혜경, 「정부수립기 경찰의 형성과 성격(1948-5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2004, 28쪽. 특히 각주 59).

24) 憲兵史編纂室, 『한국헌병사: 創設·發展編』, 憲兵司令部, 1952, 12쪽. 페이지가 장별로 새로 시작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전봉덕이 헌병사령관을 맡던 시기는 “발전기-헌병감, 헌병사령부시대”에 속해 있다.

25) 吉眞鉉, 『역사에 다시 묻는다: 반민특위와 친일파』, 三民社, 1984, 166쪽.

경찰조직이 미군정에 의해 곧장 지지받았던 것과 달리, 검찰의 역할이 인정받고 정착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렸다. 153명의 일본인 검사가 면직된 이후 미군정은 고등문관시험,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충원하였고, 나아가 특별임용을 실시해 조선총독부 재판소, 검사국 서기 출신까지 검사로 충원하였다. 오제도과 선우종원은 이때 검사가 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식민지 경찰기구 재건에 불과한 소위 “사법기구의 한인화” 조치에 해당했다. 미군정은 헌병재판소 관할범위를 확대하는 대신 한국 인재판소와 한인 검찰기구의 위상을 약화시켰다.²⁶⁾ 미군정이 영미법계의 관행에 따라 수사권을 가진 경찰 권한을 강화시켰기 때문이었다.²⁷⁾ 강성현에 의하면, 정부수립 이후에야 사상검찰의 부활을 통하여 검찰권 강화가 재차 이루어졌고, 검찰 주도로 하는 사상전 활동이 본격화되었다.

서울지방검찰청에는 호랑님 검사가 몇 있다. “천하의 오제도”로 자타가 공인하는 오제도 군을 비롯하여 장재갑, 선우종원, 이주영, 정희택 등 제군이 사상검사로 신명을賭하여 공산당과 싸우는 동안에 뚜렷한 한 개의 신념이 생겼고 그러니 신념을 가지고 일하는 이들은 두려울 것이 없이 용맹한 범처럼 “국가보안법”의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중략)

서울지방검찰청은 (중략) 검사장 이태희군은 명지휘봉을 휘둘고 있다. 후리후리한 키 수재의 특징인 “怪癖”이 없는 사교적인 삼십구세의 젊은 검사장은 해박한 법의 지식이 만들어주는 고집을 가지고 있다. (중략)

평남 강동에서 출생한 이태희군은 평고보를 졸업한 후 일본동북제대를 나와 고문을 파스하고 일제검사로써 오늘의 기초수련에 근면한 학구생활을 하여왔다. (중략)

작년 冬期 공비소탕작전을 지음하여 군경의 유대는 강화되었고 수사기관의 일원화문제를 위요하고 맺어진 내무 국방 법무의 사무적 유대는 다시 남로당원 자수사업을 통하여 튼튼해졌던 것이다.

26) 강성현, 「1945-50년 ‘검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 『기억과전망』 25, 2011, 106-114쪽.

27) 선우종원, 앞의 책, 88-89쪽.

마땅히 그러해야 할 것이로되 일찍이 있었던 사실처럼 경찰과 검찰이 대립하고 군과 검찰이 대립하는 일은 완전히 일소되었으니 서울지검과 서울경찰 그리고 서울지검과 군과의 유대가 지금처럼 강화된 것은 이태희군과 김태선군 그리고 이태희군과 채병덕군 사이의 튼튼한 인화의 결과라는 것을 식자들은 널리 인식하게 된 것이다.²⁸⁾

“호랑님 검사” 중에서 기사에 언급된 대로, 이태희는 평남 강동 출신이다. 식민지기 신의주지법 서기였던 오제도와 선우종원이 서북출신임은 앞서 밝힌바와 같고 서울지법 검사였던 장재갑은 평북 용천 출신이다. 그러니까 정희택²⁹⁾과 이주영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 서북출신이다. 이들 검사들을 비롯하여 검경군 간의 유대는 “남로당원 자수사업”, 즉 국민보도연맹 조직 활동을 발판으로 삼아 “튼튼해졌다. 평양 출신으로 일본육사를 졸업한 채병덕과 “일제검사로써 오늘의 기초수련”을 닦은 이태희 간 “튼튼한 인화의 결과”이기도 하였다.

오제도의 제안에 따라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 결성된 보도연맹은 ‘좌익전향자단체’임을 표방했으나, 실제로는 좌익전향자 등을 사상적, 조직적으로 통제하고 나아가 여타 좌익세력을 남한에서 ‘제거’하기 위한 단체였다. 보도연맹은 1949년 4월 20일 창설된 초기 당시 내무부가 주관하고 법무부, 국방부, 검찰청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직되었다. 이후 조직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도연맹은 1949년 11월 29일 중앙본부 조직체계를 재편하였다. 이때 내무부, 법무부, 국방부 3부를 최고방침은 영자로 하고, 이태희 서울지검 검사장, 장재갑, 오제도, 선우종원 검사, 金泰善 시경찰국장, 崔雲霞 등 6인이 최고지도위원회를 구성하였다.³⁰⁾

28) 「時光을 받는 人物群像 : 李太熙君」, 『동아일보』, 1950. 4. 24.

29) 1919년 경북 고령에서 출생. 일본 주오대학을 졸업하고 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합격 후 검사로 활동하였다. 미군정기 법무부 검찰국 감찰관,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하였다.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30)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실』 45, 한국역사연구회,

이처럼 경찰과 검사, 군인을 주축으로 하는 소위 ‘극우반공체제’ 성립은 익히 알려진 바나, 여기에는 서북출신으로 해방 후 관료가 된 이들의 적극적인 노력 또한 있었다. 기존 연구성과에서 정리된 대로 서북출신 엘리트들이 기독교-민족주의-반공주의를 주축으로 하는 인사들로만 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고, 친일 인사들 또한 상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식민관료의 행정체험과 해방 후 재생

앞서 살폈듯, 해방 이후 미군정 관료가 된 이들이나 정부수립 초기 관료가 된 이들 중에는 식민지관료로서 경험을 앞서 축적하였고, 이를 월남 후 남한에서 관료 활동에 활용한 이들이 상당수 있었다. 당연히 서북출신 월남민들도 포함되었다. 여기서는 몇몇 식민지관료들의 식민지기 행정체험이 해방 후에 선택적으로 재생되는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에 초점을 두겠다.

대표적인 내무관료, 경찰관료를 보자. 식민지 경찰은 조선총독부 및 소속 관서 관리의 37.7%를 차지하였다. 나아가 조선인 경찰이 전체 조선인 관리의 43.1%에 달하였다. 때문에 장신은 “경찰이 곧 총독부 관리라 해도 무리는 아니었다”고 지적한바 있다.³¹⁾ 상당수 경찰관료들은 식민지기 조선인들에게 악질적인 인상으로 남았다. 때문에 해방 직후 경찰관서가 파괴되고 조선인경찰이 폭행당하는 등의 경우가 적지 않았다. 미군정의 미국인들은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지만, ‘안정’적인 점령 실시를 위하여 “능률과 경험의 논리를 내세워” 식민지 경찰관료를 재등

2002, 296~300쪽.

31) 장신, 「조선총독부의 경찰 인사와 조선인 경찰」, 『역사문제연구』 22, 2009, 146쪽.

용하였다.³²⁾ 재차 임용된 경찰 구성의 특징으로 강혜경은 첫째 식민지기 경찰관료들이 당시 직급 그대로 혹은 1계급 승진 등용되었고, 둘째 이북에서 상당수 경찰관료들이 월남했으며, 셋째 우익청년이 경찰로 등용된 점 등을 들었다.³³⁾

식민지 경찰관료 중에서도 고급관료는 손에 꼽힐 정도였다. 조선인으로서 식민지기 경찰 간부가 되는 것은 전시체제기에 들어서야 사례가 일부 확인된다. 관례에 맞추어 日人 경찰관료가 승진에 우선권을 접하다가, 조선총독부는 내선일체가 실제로 구현되는 양상을 예시해야 했던 이유로 조선인을 경찰간부로 승진시키기 시작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무계는 전시기 전 지역에 걸쳐 조선인이 담당하지 못하였고, 경부보로 승진할 경우라 하더라도 대개 사법계 주임을 맡았다.³⁴⁾

조선인으로 경찰서장의 직분까지 올랐던 尹宇景은 일본인의 천대를 받지 않고, 관계에 나아가 입신양명하겠다는 아버지와 자신의 포부에 따라 경찰관료로 진입하였다. 식민지기 경찰에 대해 그는 “조선총독의 통치권에 기초를 두고 권력만을 행사하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경찰”이라 자평하였다.³⁵⁾ 그러면서도 그는 경찰관료가 민중의 처지를 대변하여 억울한 일을 막는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스스로 그런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고 회고하였다. 사법계 주임의 업무에 대해 그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당시 각 경찰서 사법계 주임은 검사의 지휘나 판사의 영장 없이 범죄 피의자의 체포, 구속, 석방, 가택수색, 압류 등을 임의로 하는 강제수사권이

32) 김진웅, 앞의 글, 83쪽.

33) 강혜경,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1945-1953)」,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52-56쪽.

34) 장신, 앞의 글, 170-173쪽 참조.

35) 尹宇景, 「직무지침」, 『晩省錄 : 단 한번 잠시 느껴본 행복감』,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1992, 19쪽, 28쪽.

있었고, 20원 이하의 벌금, 과료, 20일 이하의 구류 등 즉심연도는 서장의 직권이었으나 사법계 주임이 대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10일이었으나 1차 연장할 수 있었으며 행정 검속령이라는 악법을 적용하면 몇 달이라도 구속할 수 있었다. (중략)

당시 경부보는 관제상으로는 판임관 말단에 지나지 않았으나 사법계 주임으로서의 직권이 막중하였기 때문에 외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서장의 직권을 능가할 정도였다.³⁶⁾

윤우경의 말대로 사법계 주임으로서, 혹은 서장 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직권에 대한 탄력적 활용 여부는 자신의 판단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1945년 3월 1일자로 황해도 송화경찰서장으로 부임한 그는 행정검속에 의해 두석 달 씩 구속되어 있던 조선인 청장년 1백여 명을 일제히 석방하는 ‘동포애’를 발휘할 수 있었다.³⁷⁾

하지만 이런 식민지 사법행정 체험과 그 과정에서 경험한 ‘관행’은 해방 이후 재생되기도 하는 것이었다. 1949년부터 만 2년간 헌병장교이자 헌병사령부 제2처장으로 재직하였던 그는 이승만에 의해 1951년 6월 24일 서울시 경찰국장에 임명되었다. 당초 이승만은 그에게 내무부 치안국장 임명예사를 내비쳤으나 이기붕의 “권고”로 서울시 경찰국장직에 동의하였는데, 여기에는 3계급 특진에 대해 스스로가 느꼈던 부담감 또한 작용하였다. “경찰의 인사질서를 무너뜨린 데서 일어날지도 모를 비판이 염려”되었다는 것이다.³⁸⁾ 임명 결정과정에서 그가 염려한 점, 그리고 ‘인사질서’와 같은 개념을 의식한 점은 식민지기 경찰관료로서 의했으며 해방 이후 관료집단 내부에 실재했던 관행에 대해 다분히 의식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민방위군사건 당시 군법회의에 기소한 후 그는 신성모 국방부

36) 尹宇景, 위와 같음. 장신, 앞의 글, 171쪽에서도 원문의 일부가 확인가능하다.

37) 尹宇景, 「경찰서장 발령」, 위의 책, 120-123쪽.

38) 尹宇景, 「서울시 경찰국장 취임」, 위의 책, 265쪽.

장관에게

“방위군 사건은 예산의 착복횡령보다도 장정의 병사 및 환자가 많았던 탓으로 여론이 비등해 있으니 모두 장기형을 언도했다가 추후에 정상을 참작해 주도록 하는 것이 민정을 진정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유의하라고 진언……”

할 수 있었다. 식민지기 사법행정을 앞서 체험한 ‘관료’이 엮보이는 대목이다. 나아가 같은 사건의 재수사 당시에도 정치인, 장성, 고급장교가 진술하는 내용 그대로를 조서에 담아 입건하게 되면,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기에 “기밀비라는 명목으로 지출된 것은 일체 기록에 나타내지 않고 수사”하는 ‘재량’을 발휘하기도 한다.³⁹⁾

이들 식민지 경찰관료 중에서 경찰서장으로까지 진급한 조선인은 장신에 의하면 식민지기를 통틀어 총 11명이다. 이 중 이북출신인 4명은 모두 서북출신으로 윤우경[尹洪益], 金虎羽, 李益興, 李夏榮이다.⁴⁰⁾ 반민 특위에서 지목되었던 대로 이들 경찰관료는 친일관료의 상징과도 같았다.⁴¹⁾ 하지만 조선인으로서 식민지기 당시부터 치명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출세욕’ 내지 ‘입신양명’과 맞물려 권한과 권력 획득에 나선 이들이 경찰관료였다.

1898년 평남 대동에서 태어난 洪淳鳳은 3·1운동에 참가한 이후 관할주 재소 순사들이 그를 구위살았다. 1921년 6월 평양경찰서 순사시험에

39) 尹宇景, 「국민방위군 사건」, 위의 책, 255~256쪽.

40) 이들 네 명의 자세한 이력은 <표 2> 참조.

41) 윤우경은 극단의 친일파에 속하는 인물일 경우 오히려 경찰서장에 발령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尹宇景, 「경찰서장 발령」, 앞의 책, 146쪽. “친일적 행동을 하거나 불친절하여 민심을 잃은 자는 절대 [경찰서장에] 등용되지 못했고, 평소 양심을 지켜 민간의 신뢰를 받는 사람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서장을 발령했던 것이다.”

합격한 이후, 1925년에는 1년간 오늘날 경찰대학에 해당하는 조선총독부 경찰관강습소에 본과생으로 입교해 합숙교육을 받기도 하는 등 적극성을 나타내었다. 만주사변 당시 초산경찰서 소속으로 “비적의 소탕과 진압” 등의 ‘작전’을 전개하였다. 중국 동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던 조선혁명군의 국내 진입작전을 저지한 것이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그는 1934년 일본정부로부터 서8등(훈8등 서보훈장)과 만주사변 종군 기장을 수여받고, 1935년 만주국정부로부터 건국 공로장을 받았다. 이후 관동군의 일부인 만주국 경찰 행정관으로 무려 ‘초빙’되었다. 그는 만주국 빈강성 경무청 경무과, 간도성 경무청 보안과에서 보안고장과 형사고장, 특고고장 등을 맡았으며, 1939년 7월에는 사무관 겸 경정(훈8등 훈7위, 일본경찰 계급으로는 경시정에 해당)으로 승급했다.⁴²⁾ 당시 간도성 의용자위단 결성식에 참가한 『만선일보』 기사를 보자. 이 기사에는 제국일본의 경찰관료로서 홍순봉이 체험한 행정경험이 언급되어 있어 흥미롭다.

간도성은 (중략) 지난 4월 9일 이래로 匪首 양정우(楊靖宇), 김일성(金日成), 최현(崔賢) 등 적단이 때때로 성내에 침입하여 무고한 양민들의 식량과 의복 기타 금품을 약탈하는 관계로 적지 않은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중에 간도성내 각 지방 유지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는데 (중략) 제씨는 금번 당국의 양해를 얻어 전 간도성에서 명성이 높은 포수 100명을 모집하고 간도이용자위단을 조직하여 지난 20일 오전 11시에 화룡현 삼도구에서 간도성 경무청 洪 사무관(홍순봉) 이하 각지 관민 대표의 출석 하에 성대히 발회식을 거행하였다. 지난 21일부터 용약 비적 토벌차로 ○○ 방면으로 출동하였는데 이 의용자위단원들은 만주 건국 직후에 각지에서 자위단으로 비적 토벌에 상당한 공적을 나타낸 경험자들로서 간도의 치안을 하루라도 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비적 토벌에 나서게

42) 홍순봉, 『나의 생애』, 西江, 1976 ; 양봉철, 「홍순봉과 제주 4·3」, 『4·3과 역사』 17, 제주4·3연구소, 2017. 12.

된 것이다.⁴³⁾

첫째 홍순봉은 간도의용자위단 조직을 통하여 동북항일연군의 무장 게릴라투쟁 저지에 주도적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간도의용자위단이라는 조직을 반관반민의 '자발적'인 형태로 구성해내는 것을 주도했을 것이고, 만에 하나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한 것은 물론일 것이다.

간도의용자위단 등의 조직은 기실 제국일본이 관동군의 주도하에 만주 일원에서 전개하였던 토벌작전의 일환이었다.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저지하고자 일제가 수행한 '토벌'작전은 지표공작과 치본공작, 선무공작(사상공작)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는 관동군을 주축으로 日滿軍警에 의해 실시된 「1935年度秋冬季 治安肅正工作」 및 1936년도 「제3기 治安肅正計劃」에 나오는 개념으로, 당시 만주국군은 북부 東邊道 지역에 최초로 적용하였다. 무력 '토벌'을 핵심으로 하는 지표공작만으로는 만주일대의 '思想匪' 및 '政治匪' 대처에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고심했던 일제는 치본공작과 선무공작 등으로 치안대책을 확대하였다. 치본공작은 주민의 강제이주를 통한 無住地帶 설정 및 '匪民' 분리, 집단부락 건설을 통하여 무장조직을 붕쇄하고 나아가 소멸을 유도하려는 의도에서, 사상공작(선무공작)은 만주국 건국정신을 보급하고 선전하여 공산주의 및 반만항일사상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구상, 적용된 것이었다.⁴⁴⁾ 또한 치안숙정계획의 일환으로 일제는 소위 '街村淨化自衛工作'을 실시하였고 종래 중국에 존재하였던 保甲제도를

활용하였다. 보갑제를 활용하여 일제는 연좌제를 채택해 민간인의 '匪化'를 조기에 저지하고, 보갑제 안에 자위단을 조직해 경찰기관의 보조 세력으로 활용하였다.⁴⁵⁾ 위 인용문의 간도의용자위단은 이러한 만주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조직된 것이었다.

둘째 무장게릴라투쟁 저지활동은 앞서 만주사변 당시 조선혁명군의 국내진입 저지활동과 함께 '反滿抗日'의 일환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체험한 '防共' 활동이기도 하였다. 비슷한 시기 조선에서는 '朝鮮防共協會'가 1938년 8월 15일 결성되어, '공산주의 사상의 철저박멸'과 '황도사상의 선양'이란 목표 속에서 '반공' 논리를 개발하고 "사회전체의 반공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전시총동원기구 중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동반하는 전국적 단위의 사상선전기구를 당시 조선총독부가 설립한 것은 1935년 코민테른의 인민전선전술 채택에 따른 대외 정세변화, 나아가 체제내부(조선 내부)의 '사회적' 균열을 저지하고 "思想戰의 陣容"을 "整備"하기 위함이었다. 조선방공협회 설립은 조선총독부 경무국의 주도로 이루어지되 "민간층을 주체로" 하는 형식을 표방하는, 반관반민의 '자발적' 조직형태를 추구하였다.⁴⁶⁾

이처럼 사상 통제와 감시, '불온' 세력에 대한 특무활동은 식민경찰의 주요 업무였다.⁴⁷⁾ 더구나 만주에서 홍순봉은 防共·반만항일 특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재만조선인 사회를 관의 후견 속에 '자발적'인 형태로 무장시키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다. 전시체제기 경찰행정의 지향인 황도선양의 '내선일체'를 강요한 것과 동시에, 관의 일부로서 그 경험에는

45) 尹輝鐸, 위의 책, 3장 참조.

46) 이태훈, 「일제말 전시체제기 조선방공협회의 활동과 반공선전전략」, 『역사와 현실』 93, 한국역사연구회, 2014, 130~142쪽.

47)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는 식민지 경찰관료의 국경지대 정찰, 단속, 검거 등 '방공' 활동을 민족해방운동 저지 차원에 주목하여 정리한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II-2 : 친일반민족행위 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227~229쪽.

43) 「間島省義勇自衛團 結成式盛大히舉行」, 『만선일보』, 1939. 12. 23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V-19, 2009, (홍순봉) 518~519쪽. 인용문 상의 ○ 표식은 원문 그대로임.

44) 任城模, 「佐佐木到一과 만주국군」, 『황원구교수정년기념논총 : 東아시아의 人間像』, 혜안, 1996, 826쪽 ; 尹輝鐸, 『日帝下 「滿洲國」研究』, 일조각, 1996 참조.

공산주의 저지 및 봉쇄가 동반하였다.

이런 그의 식민지 행정경험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행정 관행은 해방 이후 사라졌을까? 1946년 6월 북한에서 다시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한 그는 당시 경무부장 조병옥에게 특채되어 총경에 임명, 경무부 교육국 교양과장 및 국립경찰전문학교 부교장을 담당하였다. 이후 국립경찰전문학교에서 강의한 내용을 수록한 『경찰법대의』를 간행하고, 경찰 기관지 『민주경찰』 발행에도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 이후 경무부 공안국 공안과장으로 근무하던 1948년 4·3 당시 조병옥 경무부장의 명령에 따라 「4·3 폭동사건 이후의 제주도 치안 대책안」을 기안하였다.⁴⁸⁾ 아래 인용문에 등장하는, 무장한 군경에 의한 토벌 및 체포활동을 뜻하는 ‘치표공작’은 바로 앞서 언급한 대로 만주에서 전개했던 치안대책이었다. 해방이전 만주에서의 행정체험이 ‘공비’ 소탕의 유효한 방법으로 재차 활용된 것이다.

경무부장인 조병옥 박사께서 나에게 제주도 4·3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진압책을 수립해 보라고 직접 하명이 계셨다. 나는 과거 만주 지방에서의 공비 소탕작전에 관하여 약간의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토대로 하여 치표공작이니 지하공작이니 하여 공비 진압 대책을 입안하여 공안국장을 통하여 부장에게 제출하였더니 조 부장께서는 이것은 중요한 요건이니 만큼 경무부내 전체 국·과장회의에 부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국·과장회의를 소집하여 나에게 그 안의 내용을 설명하라는 지시였으므로 나는 내가 입안한 공비 진압 근본대책 방안의 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설명하였던바 만장일치 무수정으로 통과되었다.⁴⁹⁾ (밑줄은 인용자)

48) 양봉철에 의하면 홍순봉이 작성한 기안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할 수 없고, 1948년 9월호에 고병익 명의로 된 「제주도 사태 수습에 관한 사건」(『민주경찰』 2-5, 1948. 9) 그리고 이와 “완전히 똑같은” 「경무부장 조병옥의 제주도 사태 해결에 관한 견해」(주한미육군 군정청 일반문서(1948. 7. 23), 『제주 4·3사건 자료집(미국 자료편 3)』 9)가 확인된다. 양봉철, 앞의 글, 44~46쪽.

49) 홍순봉, 앞의 책, 57~58쪽, 101쪽.

홍순봉은 4·3 이후 저항이 잦아들지 않자 1948년 5월에 직접 제주도에 내려가 강경 진압에 나섰다. 이때 함께한 金正浩 공안국장 겸 제주비상경비사령관과 제주경찰서장 文龍彩는 만주국 중앙육군훈련처(봉천군관학교) 출신이었고, 문용채는 평북 정주 출신이었다. 또한 양봉철에 의하면, 1948년 7월 당시 평북 의주 출신으로 관동군 신경현병대에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高秉億 또한 제주경찰감찰청에 근무하고 있었다. 고병익은 완화된 ‘치안숙정공작’으로 말미암아 제주도내에 “완전한 匪民分離”가 달성되지 못하였으므로 귀순자단체를 조직하거나 집단부락 신설, 보갑제도 실시와 같은 정책제언을 내놓기도 하였다.⁵⁰⁾ 이 또한 만주지역 항일무장투쟁을 저지하기 위해 관동군이 구상, 실행한바 있었던 것이었다. 이러한 구상 일부는 이범석에 의해 국회에서 진압군 작전개념으로 보고되었다. 중산간 주민을 해안으로 소개시키고 그곳에서 보갑제 실시를 통해 주민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⁵¹⁾

홍순봉은 1948년 10월 6일자로 제주경찰감찰청장에 임명되었다. 제주도 출신이자 제주4·3 진압에 상대적으로 온건한 태도를 보였던 김봉호의 후임이었다. 그의 임명은 제주도경비사령부 창설과 함께 대규모 강경진압작전(초토화작전)을 준비하려는 군경강화책이었다.⁵²⁾ 같은 해 12월 10·19 여수순천사건 진압경험이 있었던 제2연대가 제주에 진주하였고 작전이 본격화되었다. 강제이주, 축성 및 전략촌 구축을 통한 ‘비민분리’, 민심수습을 위한 선무공작, 뼈라살포를 통한 귀순공작, 민보단 동원 등이 이루어졌다. 1949년 제주일대를 시찰했던 함상훈은 축성으로 둘러싸인 부락의 모습을 전하며 “제주에서 경력을 쌓 제주도경찰국장 홍순봉

50) 고병익, 「제주도사태 수습에 관한 사건」, 『민주경찰』 2-5, 경무부 교육국, 1948. 9, 49~52쪽(양봉철, 앞의 글, 57~60쪽에서 재인용).

51)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297쪽; 『국회속기록』 제1회 제124호, 1948. 12. 8.

5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260~263쪽.

씨의 이 묘안은 확실히 전 제주도를 보루화하였고 제주도를 방위하는데 일대 공헌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는데,⁵³⁾ 여기에는 만주에서의 행정체험 또한 깊이 연루되고 있었다.

이처럼 식민지기 경찰관료들은 해방후 경찰관료로서 권한과 권력만 획득한 것은 아니었다. 식민지관료로서 체험한 행정의 제 면모와 관행들을 해방정국기 좌익들의 세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두루 활용하였다. 행정체험은 일종의 ‘자산’이자 전문적인 ‘기술’이었다. 정부수립 당시 이승만 정권 창출에 다대한 공이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장택상이라 하더라도, 윤우경이 보기엔 “경찰 [행정 경험]은 백지이어서 총무과장 최연이 청장을 보좌”할 수밖에 없었다.⁵⁴⁾ 崔燕은 식민지말기 경기도 경찰부 형사과정까지 승진하였고, 1938년 소위 ‘해산사건’으로 3백여 독립군을 ‘토벌’하여 훈장을 수여받기도 한 인물이었다. 그는 1949년 반민특위에 검거되었다.⁵⁵⁾ 반면 홍순봉, 문용채, 고병익 등 서북출신 경찰관료는 식민지 경찰관료 경험을 토대로, 서북청년회와 함께 제주 4·3사건 진압의 선봉에 섰다.

공비토벌작전은 제주 일원에서만 그치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직후 발생한 10·19 여수순천사건에도 강경진압과 특무활동은 확인되는 바, 여기서도 식민지기 만주군 간도특설대원들의 활동이 군경합동작전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었다. 평남 강서출신 백선엽은 빨치산 토벌에 있어 간도특설대의 경험이 크게 도움되었다고 인정하기도 하였다.⁵⁶⁾

물론 해방 이후 분단체제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한국군경이 수행한

53) 「제주사태의 진상, 함상훈(상)」, 『조선일보』, 1949. 6. 2 ; 김은희,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16~17쪽 ; 제주4·3사건 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의 책, 304~305쪽.

54) 尹宇景, 「전평(전국노동자총평의회)의 해체」, 앞의 책, 183쪽.

55) 吉眞鉉, 앞의 책, 156쪽.

56) 안정애, 「만주군 출신 장교의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회, 2005, 336쪽.

작전 일체가 만주에서의 경험만으로 토대를 이루었다 규정해서는 곤란하다. 제주 4·3과 10·10 여수순천사건 당시의 강경진압을 주도했던 주체는 또한 미군이기도 하였다. 여순사건 발생 직후 미 임시군사고문단은 ‘반군’을 강경 진압하기 위해 ‘4F 전술’(찾아서-고정시킨 후-싸워서-끝낸다 : Finding-Fixing-Fighting-Finishing)을 한국군에 하달했다. 그에 따라 여순사건 초기에는 선무공작보다는 강경진압이 주를 이루었던 것도 사실이다.⁵⁷⁾ 그런 점에서 보자면 해방 이후 서북출신 엘리트들의 식민지관료 경험은 한국군경과 미군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생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제국일본의 구상과 실제 구현된 제도 일체가 그 자체로 복제되었다기보다는 식민지관료의 행정체험에 의해 매개되었다. 나아가 매개된 행정체험은 해방 이후의 변화된 상황과 주요 행위자(주체)로서 미국(군)의 등장에 영향받아 각색되거나 변용되는 등 선택적으로 재생되었다.

4. 나가며 : 월남민 관료의 정체성 만들기

서북출신 월남민 관료들은 대한민국 정부 만들기에 앞장섰다. 그들은 남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였다. 보도연맹, 국민방위군사건, 4·3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서북출신의 엘리트 월남민들이 기독교-민족주의-반공주의에 기초하는 인사들로만 구성되지는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 다뤘던 친일인사들, 즉 식민관료들의 경우 사정이 유독 그러했다. 윤우경은 사법계주임, 경찰서장 재직 당시의 치안 경험을 해방 이후에도 활용하였

57) 임송자, 「여순사건 이후 선무공작을 중심으로 본 지리산지구의 빨치산 진압」, 『한국군현대사연구』 81, 2017, 187쪽.

다. 홍순봉의 사례에서는 식민지기 ‘관행’으로서의 防共주의, 즉 식민지 반공체험이 눈에 띈다. 해방 후 분단체제가 가시화되는 궤적 속에서만 반공주의가 가시화되었던 것은 아닐지 모른다. 물론 자신과 소속공동체와 뜻이 다르다 하여 사상과 무관하게 ‘빨갱이’로 호명하고 ‘처단’했던, 그러한 반공주의 행태는 해방정국과 그 이후에 고유하고 그래서 식민지기 防共과 구별된다.

방공 및 ‘공비’진압 경험은 반공주의란 키워드와 연관될 뿐, 친미나 민주주의와도 곧장 연결되지 않는다. 이 또한 서북출신 상당수가 기독교(개신교)적 전통에서 친미적, 민주주의적 입장을 견지했다는 기존 견해와 다른 대목이다. 적어도 홍순봉의 식민지기 방공과 해방정국기 반공은 곧 친미를 동반하지 않았고, 확인할 수도 없었다. 오히려 방공이 전시체제기 일본의 정책 기조이자 구체적 표출태였다고 본다면, 여기엔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제국일본의 우려와 비판이 결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친미가 꼭 논리적으로 반공주의와 연관되는 것은 아니다. 보도연맹의 목적은 공산사상의 ‘분쇄’였지만, 간사장을 맡았던 박우천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반제국주의론에 의해 사회주의적 요소를 민족주의적으로 포섭하려는 태도도 엿보인다.⁵⁸⁾ 물론 이를 일반화시키기엔 조심스럽다. 그 외 식민관료에게도 그럴지 모를 가능성의 일단을 전망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사례가 더 수집되어야 한다.

월남동기란 측면에서도 반공적 견지에서만 이루어졌다고 결론짓기 힘들다. 양봉철의 평가대로 홍순봉의 월남동기는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 여기에는 식민지 경찰관료로서 재직할 경험 때문에 더 이상 북에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기 힘들 것’이라는 당시의 전망도 포함된다. 윤우경은 식민지기에 걸쳐 경찰관료가 행한 체계적, 제도적, 물리적 폭력에 대해 해방 직후 민중들이 수행한 ‘대응’이 불편했

다. 자타가 인정하는 ‘온화한’ 경찰관료였던 터라 자신에게는 폭력이 가해지긴커녕 사회주의자들까지 처지를 돌봐주었으나, 그의 경력이 지속될지 단절될지 북에서는 예측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그는 월남하였다. 그런 점에서 반공주의는 오히려 월남 이후 경찰관료로서 정착하기 위한, 나아가 ‘커리어’를 관리하기 위해 채택한 전략에 가까울지 모른다. 삶의 태도로서 월남은 해방 이후 생애 속에서 거둬졌을 것이다.

이는 특정지역 출신, 특정한 디아스포라 경험 자체가 주체에게 꾸준히 지배적 영향을 미쳤다고보다는 시기적으로 재생되거나, 중층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것임을 시사한다. 본고에서 다루었던 서북출신 경찰관료들에게 있어서는 태평양전쟁기 방공 경험이 해방 이후 반공으로 전유되는 것일 수 있었다. 행정체험이 ‘관행’의 형태로 어색하지도 않게 재생되는 것일 수 있었고, 그것이 자신과 주변에게 성과로 이해되었다.

그럼에도 서북출신의 월남민 관료의 성격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전히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서북출신과 여타 이북출신간의 질적 차이가 있는지 여부가 적절히 검토되지 않았다. 해방정국기 월남과 이산 경험 속에서 서북출신 관료들이 네트워크를 보다 가시적 차원에서 작동시켰다 추정되긴 하나, 자신의 기록을 잘 남기지 않았던 무수한 관료들로 인해 두터운 실증은 난망하다. 한국전쟁 이후 남한에서 이념지형이 안정화되고서,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도 더 해명해야 한다.

58) 후지이 다케시, 『해방직후-정부 수립기의 민족주의와 파시즘-‘민족사회주의’라는 문제』, 『역사문제연구』 24, 2010, 143-144쪽.

참고문헌

『동아일보』 『만선일보』 『민주경찰』 『북한』 『月刊 同和』 『한국논단』

『대한민국행정간부전모』, 국회공론사, 1960.

신우중원, 『격랑80년』, 인물연구소, 1998.

尹宇景, 『晩省錄: 단 한번 잠시 느껴본 행복감』, 도서출판 서울프레스, 1992.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鄭一亨, 『오직 한 길로』, 新進文化社, 1970.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III-2: 친일반민족행위 연구』,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IV-19』, 2009.

憲兵史編纂室, 『한국헌병사: 創設·發展編』, 憲兵司令部, 1952.

홍순봉, 『나의 생애』, 西江, 1976.

吉眞鉉, 『역사에 다시 묻는다: 반민특위와 친일파』, 三民社, 1984.

김귀옥,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김은희, 「제주 4·3전략촌의 형성과 성격」, 제주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05.

서울신문사 편, 『駐韓美軍 30年: 1945~1978』, 杏林出版社, 1979.

윤정란, 『한국전쟁과 기독교』, 한울아카데미, 2015.

尹輝鐸, 『日帝下「滿洲國」研究』, 일조각, 1996.

장규식, 『일제하 한국 기독교민족주의 연구』, 혜안, 2001.

강정구, 「해방후 월남민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편, 『한국전쟁과 한국사회변동』, 풀빛, 1992.

강성현, 「1945~50년 '검찰사법'의 재건과 '사상검찰'의 '반공사법」, 『기억과

전망』 25, 2011.

강혜경, 「정부수립기 경찰의 형성과 성격(1948~50)」,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1, 2004.

강혜경, 「한국경찰의 형성과 성격(1945~1953)」,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상태, 「근현대 평안도 출신 사회지도층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김선호, 「해방직후 조선민주당의 창당과 변화-민족통일전선운동을 중심으로」, 『역사와 현실』 61, 2006.

김선호, 「국민보도연맹의 조직과 가입자」, 『역사와 현실』 45, 한국역사연구회, 2002.

김진웅, 「미군정기 국내정치에 있어 경찰의 역할」, 『大丘史學』 97, 2009.

문준영, 「헌정 초기의 정치와 사법: 제2대 검찰총장 김익진의 삶과 "검찰독립" 문제」, 『法史學研究』 34, 한국법사학회, 2006.

안정애, 「만주군 출신 장교의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한국인물사연구』 3, 한국인물사연구회, 2005.

양봉철, 「홍순봉과 제주 4·3」, 『4·3과 역사』 17, 제주4·3연구소, 2017.

이태훈, 「일제말 전시체제기 조선방공협회의 활동과 반공선전전략」, 『역사와 현실』 93, 한국역사연구회, 2014.

任城模, 「佐佐木到一과 만주국군」, 『황원구교수정년기념논총: 東아시아의人間像』, 혜안, 1996.

임송자, 「여순사건 이후 선무공작을 중심으로 본 지리산지구의 빨치산 진압」, 『한국근현대사연구』 81, 2017.

장신, 「조선총독부의 경찰 인사와 조선인 경찰」, 『역사문제연구』 22, 2009.

趙馨 朴明鮮,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후지이 다케시, 「해방직후-정부 수립기의 민족주의와 파시즘-「민족사회주의」라는 문제」, 『역사문제연구』 24, 201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http://db.history.go.kr>)

한국역대인물종합정보시스템(<http://people.aks.ac.kr>)

정일형 이태형박사 기념사업회(<http://www.chyunglee.com>)

Abstract

From Traitor to Patriot : Northwest Elites from Colonial Korea to South Korea

Lee, Bong-Kyu^{*}

This essay attempts to see how the experience of the colonial period bureaucrats of the northwestern elites affected after liberation. In previous researches, Christian-nationalism-anticommunism was focu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northwestern elites. These included political leaders of the Democratic Party of the North, based in the Northwest region, and high-ranking officials under US military government who had studied in the United States. However,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recollection of northwestern bureaucrats, especially colonial police offic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experiences of northwestern elites who collaborated with Japan in Manchuria and Joseon. Based on the experience of administrative and anti-communist experience as colonial police officers, they selectively reproduced their experiences in the Cold War context of liberation. Their colonial administration experience was utilized as skill and asset of 'anti-communist state' including Jeju 4.3 of liberation state. Finally, in addition to defin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northwest elites as Christian-nationalist-anticommunism based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also as pro-U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ases of histories of pro-Japanese elites.

Key words : northwest elites, police, bureaucrats, Administrative experience, Anticommunism, Yoon woo-kyung, Hong Soon-bong

* University of Ulsan, Department of History and Culture